

---

「2021-제10호(Vol. 18호)」

#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

본 자료는 2021. 11. 2.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li> <li>• 2022년 세계경제·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li> <li>•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li> <li>•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li> </ul>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현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재정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li> <li>•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li> </ul>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3. 예산·재정 관련법령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li> <li>• 환경책임투자 범위 구체화…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li> <li>•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li> </ul>	법제처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정책 및 연구 (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li> <li>•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li> <li>•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li> <li>•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의미</li> <li>•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상황 분석</li> <li>•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li> </ul>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8~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li> <li>•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논의</li> <li>• G20 보건-재무장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극복 위해 협력 논의</li> <li>•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li> <li>• 인공지능 전지역·전산업 확산 추진방향 수립</li> <li>•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li> <li>• 사상 최단기(299일) 무역 1조 달러 돌파</li> <li>•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li> <li>•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li> </ul>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 1. 경제

출처

##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한국은행

- 세계 경제는 ▲미국, 견조한 회복흐름 지속 ▲유로지역, 회복세 강화 ▲중국, 성장세 다소 둔화 ▲일본, 미약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의 원유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함.
- 국내 경제는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는 감소, 건설투자 및 수출은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 취업자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지속, 부동산가격 오름세는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수준(4.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됨.

[바로가기](#)

## ■ 2022년 세계경제·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 2021년 세계경제는 주요국 정책과 백신이 가파른 회복을 견인하며 6%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델타 변이, 공급망 교란 등의 성장 하방요인이 부각되며 성장 전망은 예상 대비 점차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글로벌 경제는 부양책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회복세로 4%대 후반의 높은 성장과 기저 효과, 공급망 교란 감소 등 인플레이 완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잠재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는 ① 정책(美 테이퍼링, 재정 불확실성, 中 규제 리스크), ② 금융·레버리지(高부채 부담, 자산시장 과열) ③ 환경·보건(변종 확산, 기후 변화) ④ 지정학(미·중 갈등 심화, 정정 불안 소지) 등이며, 이에 따른 이슈는 ① 위드코로나, 경제와 방역 상충관계에 해법 될까? ② 선회하는 글로벌 통화·재정 정책, 그 영향과 리스크 ③ 중국의 거대한 전환, 어디로 향할까? ④ 글로벌 경제 혈맥, 공급망 차질이 불러올 파장 ⑤ 국제금융시장을 좌우할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은? ⑥ 정책정상화로 숨은 리스크 드러나나? ⑦ 격동하는 세계, 지정학적 시대로 돌아가는가? 등임.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2021년 금융여건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기업실적의 호조가 가세되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금융여건 속에 세계주가는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주요 위협으로 격상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 2022년 금융여건은 2021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변한 여건 속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전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2022년은 회복과 동시에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며 포스트 팬데믹으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임.

[바로가기](#)

# 1. 경제

출처

## ■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쇼크의 내용) 여러 리스크 요인 중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COVID 쇼크[China shock(중국 쇼크), Oil shock(오일 쇼크), Variant shock(변이 바이러스 쇼크), Inflation shock(인플레이션 쇼크), Debt restructuring shock(부채 조정 쇼크)]를 선정하고 그 향방을 가늠해 봄.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쇼크 평가) 최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세계 및 국내 경제가 경기 전환 과정 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각국마다 과도하게 팽창된 유동성을 정책 당국이 흡수하는 정상화 과정이 유연하지 못하여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러한 다발성 쇼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정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시사점) 한국 경제가 COVID 쇼크로 회복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중국 시장의 대내외 불안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전략 마련 ② 4차 오일쇼크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적극적인 가격 헷지 전략 요구 ③ 워드 코로나의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효율적 방역 전략 마련 ④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 ⑤ 실물경제 회복 수준에 부합되는 통화·신용 정책의 유연한 정상화 과정이 요구됨.

[바로가기](#)

## ■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방역체계 전환('워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해외 주요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① [영국] 지난 7. 19.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자율적 위생수칙 준수
  - ②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접종자 위주 방역조치 완화 → 백신패스 도입
  - ③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염 확산 감수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 ④ [싱가포르]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 재도입
  - ⑤ [호주]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 발표하였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 유지 중
-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① 10월 중 성인의 90% 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한 접종 독려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
  - ② 경제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바로가기](#)

## 2. 재정

출처

### ■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 총괄) 정부는 총수입 548.8조원(전년 대비 13.7% 증가), 총지출 604.4조원(전년 대비 8.3% 증가)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적자 20조원을 축소할 계획으로 나타남.
- (재원배분 및 중점투자) 분야별 재원배분은 보건·복지·고용 분야(216.7조원), 일반·지방행정(96.8조원), 교육(83.2조원), 국방(55.2조원) 등의 순서로 편성되었으며, 중점투자 방향은 ①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②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④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임.
- (예산안 총평)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재정수지 적자 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출효율화, 수입확대 노력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 프로그램 분석)
  - ① 코로나19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 예산안 분석: 백신 및 치료제 임상 시험 현황의 모니터링 및 적시 지원으로 신속한 개발 역량 확보 필요
  - ② 한국판 뉴딜 및 전략산업분야 재정지원 사업 분석: 일부 디지털 뉴딜 분야 사업의 재정 소요, 사업성과 및 효과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③ 탄소중립경제 예산안 분석: 2022년 신설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의 미완료 상태로, 해당 법률 개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
  - ④ 신 양극화 대응 및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분석: 생계·의료급여 예외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 강화 필요, 구직급여 수급 기간 고려 등 보다 세분화된 대책 마련 필요,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필요
  - 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안 분석: 금융성 자산형성 사업의 지원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효과 제고방안 검토 필요
  - ⑥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지원 사업 분석: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의 법률안과 연계된 예산안 심사 및 장기적인 계획 마련 필요, 재정분권 2단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혼란 최소화 필요
  - ⑦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프로젝트 사업 분석: 손실보상금 재정 소요의 면밀한 추계 필요, 손실보상금 지급 지연 방지 등 집행관리 강화 필요

[바로가기](#)

### ■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중기 재정전망 개요) 이번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현상유지, 지출통제, 세입확충, 정책조합)를 구성하여 전망하였음.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장기 재정전망 결과) 2030년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60.6%~78.9% 범위(2021년 47.3%)로 전망되며,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 비율(80.9%, 2019년 D2 기준 단순평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바로가기](#)

###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0.19. 개정/’23.1.1. 시행)

법제처

-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1.12. 공포, 7.13.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감사인이 작성해야 하는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 환경책임투자 범위 구체화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13.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으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음.
- 또한,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음.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바로가기](#)

#### ■ 데이터 경제를 활짝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음.
-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확립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등임.
-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임.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EU·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동향) EU는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제시(2021.7.14.)하였으며, 미국 역시 EU와 유사한 '국경탄소조정'의 도입을 추진 중임.
  - \* Fit for 55: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2개 항목을 담은 입법 패키지로,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은 역내 수입업자에 대한 CBAM 인증서 매입 의무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매입 비용은 궁극적으로 수출국 제조기업에게 전가되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및 WCI(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가격과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배출권 가격 차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하는 EU 및 미국 수입업자의 CBAM 인증서 매입 예상 비용 부담을 추정할 수 있음.
  - \* EU-ETS: 2005년 1월 다자가 참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여하는 많은 부문이 참여하는 유럽 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
- (시사점) CBAM 인증서 매입 비용은 궁극적으로 수출국 제조업 회사들에게 전가되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출국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는 EU 및 미국 등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격을 지불하였는지를 증명·제출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는 ESG 경영,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배출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음.
- 반면, 유로지역은 남부유럽 등의 재정위기를 통해 배운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법을 기조로 삼아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졌음.

〈 GDP대비 재량적 재정정책 〉

국가	추가적 재정지출	대출 및 보증 등의 유동성 지원
대한민국	4.5	10.1
프랑스	9.6	15.2
이탈리아	10.9	35.3
독일	13.64	27.8
영국	16.2	16.7
일본	16.5	28.3
미국	25.4	2.4
선진국 그룹(AEs) 평균	17.31	11.4

선진국 그룹: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등 20개국

- 202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편성되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을 것임. 다만, 미국과 다른 경제·사회보장시스템과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위주로 한 지원책의 설계를 통해 경기회복 이후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토지 및 건물을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는 지역자산화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가 소유·관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역 이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
  - \* 지역자산화: 사적 혹은 공적 재산권에 귀속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자의 토지이용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향유하는 과정
  - \* 사회적 부동산: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
- 사회적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적고 정책적 지원도 미진한 상태임.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부동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연결돼야 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함.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사회적 부동산 사례들을 고려하여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 마련과 중장기적 방향 제시가 필요함.

[바로가기](#)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의의

강원연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과 달리 납세자 즉 기부자가 자신의 의지로 납세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제이자 지역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됨.
-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최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부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조속히 대안들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세제로 정착되도록 해야 함.
-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향납세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방 소멸이라는 우리의 어려운 지방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램.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상황 분석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생존력도 약화되고 있고, 올해 2~4월부터 대면서비스의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자영업의 경영 악화 정도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 수준을 회복하거나 80~90%에 이른 업종이 있는가 하면, 올해까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업종도 있음. 특히, 여행업의 경우 2021년 매출 수준이 2019년의 10%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방역대책이 완화되면 자영업의 경영상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업종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이나 비대면 소비로의 대체 등 소비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므로 위드코로나 단계에서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
- 그 간 정책 대출과 몇 차례의 자영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그리고 향후 지급될 손실보상금 등의 정부 지원으로도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영업의 경영 악화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업종별로 자영업의 상태를 살피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 우주는 국제 공유지로서 다수의 국가들이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을 발사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존재함.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우주 개발이 최근 민간 주도로 변하면서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함.
  - \*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바로가기](#)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5. 뉴스브리핑

출처

### ■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10.28.(목)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①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② 4분기 경기회복력 보강을 위한 재정투자·집행 강화 방안 ③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
- 먼저,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11월부터 국고채 발행물량을 단기물 중심으로 축소 조정하고, 향후 국채시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긴급바이백 등을 적기 시행하고 4/4분기 재정운영은 경기 회복세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집행을 제고와 공공기관·민자사업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임.
- 또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3대 분야별 핵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두어 올해(0.8조원) 대비 54% 증액한 1.3조원 규모로 편성함.

[바로가기](#)

### ■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논의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10.29.(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제9회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힘.
- 「국제재정포럼」은 매년 주요국 재정당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정정책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제1세션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에서는 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②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③ 아일랜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제2세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정책의 역할’에서는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22년 그린뉴딜 예산안 ② 유럽연합의 녹색 재정정책 ③ 독일의 포스트 코로나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함.
- 한편, 이번 국제재정포럼 개최를 계기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총 67조원 규모의 작년 네 차례 추경 및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등 코로나19 사태에 재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영문으로 정리한 브로슈어를 발간하였음.

[바로가기](#)

### ■ G20 보건-재무장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극복 위해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0.29.(금) 「G20 재무·보건 합동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글로벌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음.
-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위기가 개발도상국 및 취약계층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개선 및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접근성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또한, 미래 보건충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및 보편적 건강 보장(UHC)에 초점을 맞추는 등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논의함.
- 한편, 이번 회의에서 G20 재무·보건장관들은 국제보건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G20 공동 재무-보건 태스크포스’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무·보건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임.

[바로가기](#)

## 5. 뉴스브리핑

출처

###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0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도 정부 주요정책·전략 및 연구개발 집중 투자의 결과로,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돋보인 총 12개의 최우수 성과를 선정하였음.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성과' 선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미를 더하였음.
- 한편,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됨.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 인공지능 전지역·전산업 확산 추진방향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8.(목)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디지털뉴딜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인공지능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고,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지역균형 뉴딜' 등을 통해 지역의 인공지능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은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1년 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의 주력산업 및 현장수요, 각 지자체별 정책추진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디지털뉴딜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 속으로 본격 확산하기 위해 이번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음.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10.25.(월)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음.
-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04년 서울에서 도입하여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5. 뉴스브리핑

출처

### ■ 사상 최단기(299일) 무역 1조 달러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0.26.(화)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밝혔음.
- 올해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지난 10.20.(수)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5,000억 달러 행진을 이어나갔음.
-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조업 경쟁력 ▲수출 물량과 단가의 고른 성장세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 ▲수출 저변의 확대 등이며,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무역규모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한편, 10.27.(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을 공유하고, 수출현장으로 해소 및 미래 무역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바로가기](#)

### ■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차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혔음.
- 기후변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및 금융시스템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긴요한 시점으로, 중앙은행 자체적으로도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파악과 대응전략 마련 추진이 요구됨.
- 한국은행은 'BOK 2030'('20.6월 발표)을 통해 한국은행의 책무('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를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바로가기](#)

###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0.26.(화) 10:00~11:10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음.
-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 고려 시,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향후 경기급락·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 시 급증한 가계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 가계부채 관리 3개 과제 세부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와 같음.
-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등임.
- 한편, 이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추진 가능한 추가 방안을 마련·사전예고 하고 적기에 대응할 예정임.

[바로가기](#)